

“군산을 미래자동차 중심지로”

송하진 도지사,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 관련

“전북형 일자리 조기 정착 속도 내
2024년 일자리 1700개 창출할 것”

“명신에 이어, 이번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으로, 전북도 군산이 전기 상용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1,7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이뤘겠습니다.”

19일 에디슨 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꿈이 아닌 현실”이라며 “전기SUV, 전기트럭, 전기버스 등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으로 전라북도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지사는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은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중

견,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으로 재편하는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지난 2019년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이 참여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 협약을 이끌어냈다.

특히,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상생 협력에 참여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월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된 이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주)명신이 첫 전기차인 다니고 밴(VAN)을 출시했고,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에서도 전기차 트럭인 스마트(SMART) T1이 본격



송하진 도지사가 19일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적인 생산을 알렸다. 이처럼 군산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딛고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로 산업 지도가 빠르게 재편, 전환될 수 있

었던 데에는 송 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부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송하진 지사는 “전기차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도민의 열망과 기업 노조의 상생 의지가 만든 결과”라며 “민관의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군산을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지, 미래 자동차 중심지로 만들어 가도록 전북도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선진형 임금체계 구축, 공동 근로복지기금 도입 등 정책적 지원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조기 정착에 속도를 내겠다”며 “결국 전북 전기차 산업의 성공은 시장진출과 수요확대에 있다. 전북의 힘으로 만든 전기차 ‘스마트(SMART) T1’과 다니고 밴(VAN)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은 19일 군산형 일자리인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 영상 축사

“전기차 시대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

“상생형 일자리 통해 고용 안전망 촘촘하게 구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주) 준공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준공은 군산의 전기차 시대를 알리는 힘찬 기적 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517억 원이 투자될 것이다. 17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11만대의 전기차 생산될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 기업이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경

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형 일자리를 비롯한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 밀양, 횡성, 부산, 대구, 구미, 신안 등 전국 여덟 개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중요한 축인 ‘휴먼 뉴딜’의 실현으로 전국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군산은 개항 이후 위기를 수차례 겪었지만, 언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왔다. ‘군산형일자리’ 역시 친환경 전기차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송영길 “우상호 농지법 무혐의 환영... 타 의원 고동 안타까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무혐의 처리된 것을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탄소산업 기업 비나텍 공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우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그랬을 것처럼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송 대표와 우 의원은 연세대 81학년 동기이기도 하다. /뉴시스



“정읍·고창 핵심사업 내년 국가예산 반영해달라”

민주 윤준병 의원, 기재부 찾아 노을대교 건설·정읍사 활용 공원 조성 등 현안 건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윤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확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 18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찾아 면담한데 이어, 19일에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만나 정읍·고창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0년 넘는 고창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창-부안(노을대교) 국도건설(총사업비 3,300억) 22년 예산 반영 요청,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총사업비 300억), ▲GMP기반 농축산물 미생물산업화 지원사업(총사업비 100억), ▲무성서원 수련원 건립(총사업비 58억), ▲정읍사 활용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총사업비 30억), ▲부잔저수지 치수능력 확대사업(총사업비 90억) 등 정읍·고창 지역 발전에 중요한 주요 중점확보 사업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주까지 3차 심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정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만나 정읍·고창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기재부 및 소관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지자체와 소통하며,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국가예산 확보의 참용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고창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요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통한 조장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국가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이지만, 36년 공직 경험을 살려 2022년 국가예산 반

영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정부예산안 반영 이후에도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국회 단계 예산심의까지 2022년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정읍·고창 발전과 주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이용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무죄 확정... “검찰, 자성해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2심 무죄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줘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한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죄의 굴레까지 씌우려 했다”라며 “국회의원에 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떠한지 가능해볼까 왜 뜬금없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중부세 과세 기준 9→11억원 개정안 처리

세제 개편 통해 기존 대상 중 30% 이상 세금 부담 벗어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 대상 주택은 52만5000여 가구에서 34만600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중부세 대상 중 30% 이상 이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부담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안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밀어붙였지만 시장 혼란을 줄 것이라 우려 속에 폐기하고 대신 11억원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6000여 가구다. 전체 주택 중 1.98% 수준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한 현행 중부세 납부 대상이 전국 52만 5000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7만9000여 가구가 이번 중부세 개편으로 따른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 숫자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8구에 70% 가량이 몰려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11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구 8만1800여 가구, 서초구 6만6000여 가구, 송파구 5만7000여 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중부세법 개정안으로 적지 않은 1주택자들이 중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 일각에서는 집값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 기준으로 12억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싼 집이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의 가격을 마냥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것도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나 이번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기립표결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했다.

이항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0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 전반적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국원의원 소속 의원 50여명이 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10조원 규모 모태펀드 벤처·중기 성장 지원”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중소기업이 새 성장동력 돼야”

연구개발 능력 배양·우수인력 확보 등 난제 설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9일 모태펀드 10조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저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연구개발(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취지다.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자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대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들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도전 지원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 선제, 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